

靑 “北 석탄 반입협의 없다… 美도 韓정부 신뢰”

‘북한산 석탄 딜레마’ 오해와 진실

선박 5척 ‘러시아산 둔갑’ 의혹
美 “비핵화때 까지 제재완화 없다”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 조사가 약 10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은 러시아와 중국 등에서 환적돼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으로 반입되고 있다고 제기됐다.

◆북한산 석탄, 러시아산으로 둔갑 의혹

보고서는 파나마 선적 ‘스카이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글로리’호가 지난해 10월 러시아 흘름스크항에서 북한산 석탄 9000여톤을 선적한 뒤 우리나라로 입항, 해당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유한국당 ‘북한 석탄 대책 TF’ 단장인 유기준 의원은 지난해 10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국내에 들여와



세관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오른 사이닝리치호는 올해 5월에도 1만톤이 넘는 석탄을 국내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진롱호도 지난 5월과 6월 국내에 석탄으로 추정되는 연료를 싣고 들어온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외교부는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의혹을 받는 선박 진롱호는 북한산이 아닌 러시아산 석탄을 적재하고 들어왔으며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석탄이 러시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알려진 진롱(Jin Long)호가 서 있다. /연합뉴스

아산이라는 관련 서류가 있고 이를 통해 1차 확인을 했다”며 “아직 혐의가 발견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과 관련해선 관계기관에서 전반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에 연루된 선박은 스카이엔젤, 리치글로리, 사이닝리치호, 진롱, 안취안저우66 등 5척이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공기관, 기업들과 정부도 관련된 문제”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국민에게 설명해 줄 때가 됐는데 아직도 설명 해주지 않아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靑 “미국이 韓 정부 신뢰한다”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제재 이행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청와대는 “대북제재의 주체가 아니라 문제를 이끄는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에 클레임을 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미국이 클레

임을 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북한산 석탄 문제와 관련해 미국무부가 ‘한국 정부를 깊이 신뢰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7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밀반입 의혹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정 실장이 석탄 밀반입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사 진행상황을 설명하며 “한국 정부는 미국과 전적으로 협력해왔으며 기소를 포함해 한국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 ‘최대 압박’이라고 부르는 제재를 계속 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 완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볼턴 보좌관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끈 것도 바로 이러한 제재 덕분”이라며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를 이뤄내도록 그들 앞에서 제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남북 통일축구대회’ 11일 서울 상암서 개최

내일 北대표단 도착·환영만찬
판문점 선언 이후 첫 민간교류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4·27 판문점선언 이후 첫 민간교류다. 무려 11년만에 북측 노동단체가 남측을 방문하는 친선 행사기도 하다. 남측의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과 북측의 조선직업총동맹(조선직총)은 지난 1999년 평양에서 남북친선축구대회를 연 이래로, 2007년 창원, 2015년 평양에서 대회를 개최한 이후 3년만에 올해 서울에서 대회를 재개한다.

8일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조직위원회는 여의도 한국노총빌딩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회와 관련한 일정과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남북노동자축구대회는 지난 20년간 정권의 정치성향에 따라 개최된 것이 아닌, 남북 노동자들의 뜨거운 통일의 염원, 자부통일의 의지가 낳은 결과물이었다”며 “판문점 선언이 밝힌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에 남북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관찰할 것을 결의하는 대회”라고 의의를 소개했다. 조직위에 따르면, 이번 대회 일정은 우



8일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조직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건물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일부터 열리는 대회 일정과 세부사항을 소개했다. 왼쪽은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오른쪽은 조선직업총동맹 대변인이다. /오진희 기자

선 금요일인 10일 오전 북측 대표단이 강원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국사무소(CIQ)에 도착해 환영인사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북측 대표단은 북한 조선직총과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선신보를 포함한 6명의 기자단 등 총 64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위커피호텔에서 북측 대표단에 대한 공식 환영식, 남북 노동자 3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 북측 대표단의 양대노총 청사방문과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축구선수 단 훈련연습에 이어 저녁엔 환영만찬이 예정돼 있다.

본 대회인 축구대회는 11일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이뤄진다. 축구대회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남북 3개단체 대표자 회의가 위커피호텔에서 열린다. 또한 같은 곳에서 남북노동자 산별지역별 상봉 모임도 갖는다. 이어 본 대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다. 축구대회 개막선언행사에서 단일기가 계양되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6.15 공동선언실천 남북위원회 관계자가 축사를 한다.

마지막날인 12일 아침 대회 참가자들은 마석 모란공원으로 이동해 전대일 열사, 어머니 이소선 열사 그리고 문익환 목사 묘역을 찾아 헌화한다. 오후에는 위커피호텔에서 응원단의 북측대표단 환송이 계획돼 있다. 북측 대표단은 다시 도라산 CIQ로 이동해 북으로 넘어간다. /오진희 기자 valere@

“은산·금산분리 완화, 공약파기 아냐 대원칙 지키며 운신 폭 넓혀줘야”

靑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 없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발언이 은산분리에 대한 공약 파기가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8일 “은산분리나 금산분리는 지켜져야한다고 한 기존 입장과 (문 대통령)이 어제 현장에서 했던 발언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라고 밝히며 “그러나 지금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집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 대통령 취임후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선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해 자유로운 진입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진입 규제 등 금융 분야의 사전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해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초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선 “금융도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한다”면서 “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대선)후보 당시 대통령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께서 하셨던 공약과 말씀을 찾아봤더니 어제 발언과 달라진 게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인터넷 전문은행에 자본·기술을 투자할 수 있는 ‘혁신 IT기업’이 대기업이 포함된 IT 기업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 언급의 취지는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고 그를 위해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국회에 몇 가지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자격요건도 정해진 게 아니고 국회 협의 과정을 통해 여러 주체가 논의하고 타협점을 찾아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혁신 IT기업이 재벌 IT기업과 다른 것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 같이 어디까지 제한할 것이냐에 대해 앞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 이외에 정부에서 따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에 자신할 수 없지만, 별도로 내지는 않을 것 같다”며 “지금 법안들이 충분히 나와 있어 국회 정무위가 중심이 되어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유통기업 시장 독식, 경제전반 흔들어”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사진)은 8일 “자영업자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원하고 있다. 어떤 부분이든 원칙을 세워야 하지만, 원칙 속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이날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에 잇따라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인 비서관은 “자영업자들이 힘든 원인을 최저임금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올바른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유통(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며 자영업이 붕괴한 측면이 많다. 이 사태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흔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관해 “지금 자영업자들이 위기인데, 여기서 최저임금이 2년에 걸쳐 30% 가까이 오른다”며 “이는 목까지 물이 차 있는 상황에서 입과 코를 막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승호 기자